

# ‘돌아온 조국’ 버르는 野… 폴리페서 등 송곳청문회 예고

민정수석 해임 2주만에 장관 지명 ‘정치적 중립’ 문제… 野, 비판 쏟아 나경원 “야당과 전쟁선포한 개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찍부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조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 책임자에서 대상자로 입장이 바뀐 만큼 야당이 전례 없이 혹독한 검증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2년 2개월간 장관 등 각종 요직에 임명될 인사들의 검증을 총괄하

다가 민정수석을 떠난 지 2주일 만인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난 지 보름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탓에, 논란이 일면서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뿐 아니라 총선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9대 총선 9개월 전 권좌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한 사례가 있다. 권 민정수석은 영부인과 친밀한 사이라는 의혹으로 공세를 받은 끝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지명은)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지적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와 싸워보자는 이야기”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질·도덕성·업무 능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시가격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151.54㎡)를 보유했다. 이 아파트의 매

매시세(한국감정원)는 15억~17억 5000만원가량이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QM3와 아반떼 차량을, 부인 명의로 SM6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야당은 조 수석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자세다. 조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논란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스스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한 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에 관해 문자를 해명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 내용이 몇몇 의원들 사이에 공유되며 외부에도 알려졌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2기 내각 완성한 文, ‘對日행보’ 전력투구

최기영 과기부장관, 반도체 석학 정평 경제보복 일본 정부에 강력대응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의 마침표를 찍는 개각을 지난 9일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시선이 다시 대일(對日)행보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이 추후 대일행보에 집중할 것이란 해석은 지난 8·9개각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본에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경우,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확실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석학으로 정평이 났

고, 일본발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대응에 맞설 적임자로도 꼽힌다. 즉 2기 내각이 완성되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에 더 강경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문 대통령의 당시 개각과 관련해 일본 외신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개각 소식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거침없이 반일

(反日) 발언을 한 점을 부각시켰다. 최 후보자와 관련해선 ‘반도체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일본 조치에 대항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최 후보자는) 일본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조 후보자는 반일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전문가, 언론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 해야”

이원욱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대상 수정, 도입 2021년으로 미뤄야”

주 52시간 근로제의 속도조절을 위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춘다는 내용의 입법안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

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미루는 게 골자다.

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석대성 기자

## 日 전범기업, 정부 수의계약 막는다

김정우 의원, 관련법안 발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수의계약으로만 연평균 약 98억원에 달하는 전범기업 물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전범기업 설립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정부 각 부처·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 9244건이다.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

한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542건, 94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선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석대성 기자

## 육아휴직 쓰려다 해고당해… 법원 “부당”

부당해고 판정취소 소송 ‘원고 패소’

사유는 존재하지만 해고는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고 했다. 요양원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A요양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요양원은 지난해 2월 간호사 B씨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대체인력을 구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다. 며칠 뒤 A요양원은 B씨가 글을 게시한 것을 질책하며 해고 통보했다.

A요양원의 해고 통보에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징계

재판부는 “A요양원은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판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경 기자